



보도자료

2025.5.27(화)

고상진 빛의혁명시민본부 행정지원팀장(010.3654.8525)

전공노 법원본부, 민주당과 정책협약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책협약식을 열고 사법개혁 완수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민주당에서 서영교 공동선대위원장, 김현정 빛의혁명시민본부 수석부분부장, 전공노 법원본부에서는 이성민 본부장, 이정윤·최자성 부분부장, 복소연 사무처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전공노 법원본부는 현안사업 해설을 통해 “사상 초유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졸속 판결에 따른 국민 신뢰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투쟁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전공노 법원본부는 또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형사 본안소송뿐만 아니라 신청·경매 등 비송사건의 신속한 처리도 중요한데 민·형사 소송을 담당하는 법관과 재판연구원의 증원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노 법원본부는 △사법보좌관과 개인회생위원 증원 △법원(양형)조사관의 법제화 입법 등을 요구했다.

이성민 본부장은 “나쁜 판결로 국민들에게 욕을 먹는 것은 법관이 아니라 법원의 공무원들”이라며 “이번 정책협약이 정책으로 실현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법원에는 법관보다 많은 법원소속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확인한다”며 “오늘 정책협약을 바탕으로 법원본부와 국민들이 열망하는 사법개혁을 반드시 실천하자”고 말했다.

김현정 빛의혁명시민본부 수석부분부장은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국민적 신뢰를

무참히 훼손하는 모습을 괴롭고 참담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며 “오늘의 정책협약은 사법개혁과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끝/

*사진첨부

